

전남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 전국 17개 시·도 최고...지속 증가

호남통계청,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

2021년 11월 기준 전남(6.8%)·전북(5.7%)·광주(3.3%)

전남의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전북(25만명), 전남(24만9000명), 광주(23만3000명), 제주(11만5000명)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전북(-6만9000명), 광주(-5만9000명), 전남(-5만7000명), 제주(-7000명)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아동인구 비율은 제주(17.0%), 광주(15.8%), 전북(14.0%), 전남(14.0%) 순으로 2016년 이후 아동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아동이 1명인 가구 비율은 광주(47.6%), 전북(47.4%), 전남(47.1%), 제주(47.1%) 순이며, 호남·제주지역 모두 전국(51.1%) 대비 낮았다.

같은해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비율은 제주(52.9%), 전남(52.9%), 전북(52.6%), 광주(52.4%) 순이며, 호남·제주지역 모두 전국(48.9%) 대비 높았다.

2021년 평균 아동 가구원 수는 제주(1.67명), 전남(1.65명), 전북(1.64명), 광주(1.62명) 순이었으며 2015년 대비 제주(-0.03명), 광주(-0.03명), 전북(-0.02명), 전남(-0.01명) 순으로 감소했다.

2021년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은 전남(6.8%), 전북(5.7%), 제주(4.8%), 광주(3.3%) 순으로 전남과 전북은 전국 1위, 2위를 기록했다.

2015년 대비 전남(2.2%p), 전북(2.1%p)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호남·제주지역 다문화 아동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남은 2015년 4.6%, 2016년 4.9%, 2017년 5.2%, 2018년 5.6%, 2019년 6.1%, 2020년 6.5%, 2021년 6.8%다.

2021년 양부모 양육 아동 비율은 광주(88.4%), 제주(86.2%), 전북(85.3%), 전남(85.2%) 순이며, 호남·제주지역 모두 전국(88.4%) 대비 낮았다.

2015년 대비 광주, 전북, 전남의 양부모 양육 아동 비율은 증가하고 제주는 감소했다.

2021년 한부모(부) 양육 아동 비율은 전남(40.5%), 전북(35.0%), 제주(33.6%), 광주(30.8%) 순이며, 전북 및 전남은 전국(34.0%)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제주(-5.9%p), 전남(-4.0%p), 전북(-2.5%p), 광주(-0.7%p) 순으로 감소했다.

2021년 양부모 양육 다문화 아동 비율은 광주(78.6%), 제주(77.9%), 전북(77.7%), 전남(77.6%) 순이며, 호남·제주지역 모두 전국(77.5%) 대비 높았다.

2021년 양부모가구의 맞벌이가구 비율은 광주(72.5%), 제주(71.3%), 전북(71.0%), 전남(67.4%) 순이며, 전남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69.7%) 대비 높았다.

같은해 양부모가구의 외벌이가구 비율은 전남(29.8%)만 전국(28.9%) 대비 높으며, 2015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감소했다.

2021년 상시근로자(부)의 육아휴직률은 제주(5.5%), 광주(3.5%), 전남(3.4%), 전북(2.8%) 순이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해 상시근로자(모)의 육아휴직률은 제주(18.8%), 광주(18.6%), 전남(16.8%), 전북(15.9%) 순으로 전국(18.9%) 대비 낮으며, 2015년 대비 증가했다.

2021년 호남·제주지역 대기업, 중견기업 상시근로자(부)의 육아휴직률은 중·소기업에 비해 높았으며, 2015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기업, 중견기업 상시근로자(모)의 육아휴직률은 중·소기업에 비해 높았으며, 2015년 대비 광주, 전북의 대기업 상시근로자 모 육아휴직률은 감소했다.

2021년 아동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광주(85.6%), 전북(74.4%), 전남(69.8%), 제주(35.3%) 순이었다.

호남지역에 비해 제주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32.3%), 연립다세대주택 거주 비율(2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용일 기자



‘진압 반발’ 한국노총 광양서 대정부 투쟁 결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포스코 하청노동자 연대 ‘망루 농성’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 ‘수산 1번지’ 전남도, 대응 비상

전남도 전담조직 구성...부·울·경, 제주와 공동 대응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해 저터널 내 해수 주입을 본격화 한 가운데 ‘국내 수산 1번지’ 전남도가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바다 양식과 염전 등 국내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수산업 본거지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영해가 오염될 경우 그 피해는 견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부산·울산·경남, 제주와 함께 5개 시·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22일부터 전남 수산물 안전생산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4개팀 8명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한 가운데 방류 전·중·후로 나눠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방류 전 대응으로 정부에 수산물 전품

목(1000건 이상)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해수감시 확대’, ‘사전수매·비축’,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건의했다.

방류 중에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 시행’,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강화’ (17→21개 품목), ‘월산지표시 품목확대’ (15→20개 품목), ‘단속강화’, ‘도내 해역 방사능 실시간 측정’, 생산 수산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유기인증 확대’ (양식면적 3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운영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 대응 단계인 방류 후에는 소비위축

에 대응키위해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와 피해보전금 지급을 건의하고, 소비위축 수산물의 정부수매 건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주기적 안전성 검증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정책 건의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법·종합대책 마련’, ‘수산물 사전수매(양식포함) 확대’, ‘유통이력 관리·원산지표시 강화’, ‘소비위축 손실보상금 실시계획 수립’, ‘해역 분석자료 방송 자막제공’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남 특산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 값이 10% 가까이 오르는 등 벌써부터 소금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전남 교육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력 발전소 오염수가 방류되면 지역 학생들이 오염된 수산물로 만든 학교급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남 곳곳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피해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잇따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